

TPP11의 향방

- 탈퇴의 불이익 미국에 설득. 발효를 통한 복귀압력 강화 -

* 이 자료는 우라다슈지로(浦田秀次郎) 와세다(早稻田)대학 교수, 피터·페트리 브랜다이스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“TPP11의 향방, 탈퇴의 불이익 미국에 설득. 발효를 통한 복귀압력 강화(2017.11.6.)”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하고 시사점을 덧붙인 것임

- TPP11 발효시 가맹국들의 국민소득증가에 기여
- 미일FTA는 TPP보다도 경제적 이익이 적어
- FTA 추진을 위해 일본은 농업정책 전환해야

□ 미국의 TPP탈퇴와 TPP11

- 5년 반이라는 기간에 걸쳐 교섭, 2016년 2월에 서명한 TPP는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서명을 함으로써 발효가 불가능하게 됨
 -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GDP의 합계가 12개 참가국 전체의 85%이상을 점하는 6개국 이상에 의한 비준이 필요하나, 60%를 점하는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음
- TPP는 일본, 미국, 호주 등 APEC에 속하는 12개국으로 구성된 FTA임. 세계 GDP와 무역에서 12개국은 각각 36%, 26%를 점하고, TPP는 장래 세계무역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큼
-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국의 복귀는 비현실적이며,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형태로 미국을 제외한 TPP11의 실현을 위한 협의가 2017년 5월부터 시작됨
 - 2017년 11월의 APEC정상회담을 기회로 11개국의 정상에 의한 큰 틀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
 - 미국의 요구로 각국이 양보한 항목에 대하여 동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, 의약품데이터의 보호기간 등 11개국이 동결을 받아들이기 쉬운 항목도 있는가 하면, 국영기업의 우대제한 등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

- 또한 10월말에 새로이 발족한 뉴질랜드 연립정권은 투자정책에 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
- 일본의 교섭단은 큰 틀 합의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, 호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됨

□ TPP 탈퇴에 따른 미국의 손실

- 미국은 TPP로부터 탈퇴와 TPP11의 체결로 손실을 입게됨
 - TPP와 TPP11 등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,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, TPP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2030년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0.5% 증가하나, 미국이 제외된 TPP11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2%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TPP는 가맹국 상호 무역·투자의 자유화와 함께 전자상거래, 국영기업, 노동, 환경 등 여타 FTA에는 없는 분야의 규범·규정도 포함한 포괄적인(21세기형 무역협정)FTA임
 - 가맹국은 각국간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소득을 늘리게 되나 탈퇴한 미국은 이러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음
- TPP11이 체결되면 가맹국들은 각국간 무역을 우대하여 미국과의 무역을 축소시키기 때문에, 미국은 국민소득의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음
 - 나아가 TPP 합의 후에 가맹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한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태국, 대만이 참가하여 TPP16이 체결되면 미국의 피해는 확대됨
- 미국이 의욕을 보이는 미일FTA는 TPP보다도 이익이 적고, 일본에서는 농업분야 등에서 강한 반대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, 미국으로서는 TPP로의 복귀가 바람직한 것은 자명함

□ TPP11을 조기 발효시켜야 하는 이유

- 일본이 TPP11을 조기에 발효시켜야만 하는 이유로는 적어도 4가지가 있음
 - 제 1은 TPP11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 TPP를 기본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가맹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됨
 - 일본의 성장원천으로는 상품무역에서 관세 삭감과 제품의 규격·표준의 조화 등에 의한 수출의 확대, 자원배분과 생산성 향상, 서비스무역과 투자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음
 - 제 2는 TPP11은 FTA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고, 아시아태평양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투명성이 높아 안정적인 무역·투자 환경 구축에 기여함
 - 제 3은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, TPP11과 같은 메가 FTA의 실현은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억제하고 여타 메가FTA교섭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음
 - 제 4는 TPP11은 미국에게 수출억제를 통하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피하기 위해 TPP로 복귀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음. 미국의 복귀에 대비하여 TPP11을 발효시켜 놓아야 함

□ TPP11의 확대효과

- TPP11의 협의에서 합의의 전망이 서면, 일본은 여타 가맹국들과 함께 참가에 관심을 보인 국가들을 설득적으로 권유하여 TPP11의 확대를 위해 행동해야만 함
 - TPP16이 체결되면 가맹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하여 TPP복귀 압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
- TPP11의 협의 진전은 동 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제후 (RCEP)나 일본과 EU의 경제제후협정(EPA)등 여타 메가FTA 교섭을 자극함
 - 미국을 제외한 이들 메가 FTA체결은 미국의 무역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TPP복귀를 촉진하는 가능성을 높임

□ RCEP 교섭 진전시켜야

- 일본과 함께 중국, 인도, 호주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RCEP교섭은 2013년 5월에 개시되었으나 발전단계가 크게 다른 국가들이 참가하는 점도 있어, 교섭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
- 그러나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고 자유롭고 안정된 규범·규정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환경이 확립되면, 일본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에 의한 지역 레벨의 서플라이체인이 구축이 활발해져 동아시아 경제는 한층 성장하게 됨
- 일본은 RCEP교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ASEAN각국에 대하여 세관업무의 신속화를 위한 기술협력 등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, 교섭추진에 노력하고 있음
- 같은 생각을 가진 호주나 뉴질랜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이나 인도 등의 주요국과도 공통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조기에 합의를 이루어내야 함

□ 일·EU EPA의 완결을 통한 조기발효

- 일·EU EPA교섭은 2017년 7월에 큰틀합의를 이루어냈음
 - 일·EU EPA는 TPP에 맞먹는 고수준의 무역자유화 및 여러가지의 룰을 포함한 포괄적인 EPA로서 거대시장의 실현으로 일본과 EU쌍방에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세계 무역 규범·규정의 구축에 기여할 것임
 - 앞으로 투자분야에서 분쟁해결이 관한 약정 등 남아있는 논점을 정리하고 조기에 발효시켜야 함

□ FTA 추진을 위해 일본의 농업정책 전환해야

- 일본의 FTA교섭에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 국내 농업보호임

- 농업시장의 개방이나 무역자유화가 어려워, 교섭상대국에게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수 없음
-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농업정책은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한 후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았음
- 무역자유화에 의해 생산성 저하나 실업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보상이나 교육·훈련 등의 세이프가드(안전망)을 준비하고 구조개혁과 동시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함
-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경제가 재생되고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

□ 시사점

- TPP와 비교하여 TPP11은 단순히 가맹국의 감소(12개국→11개국)와 이에 따른 시장의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함
- 첫째, TPP가맹국의 GDP와 무역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, TPP11개국과 특히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큼
- 둘째, TPP의 운영방식이 TPP11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일부 규범·규정들이 바뀌거나 소멸될 수 있음
- 이에 TPP11 가맹국들로서는 일단은 미국을 TPP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선책임
- 미국으로서는 TPP11을 비롯한 메가 FTA로부터 배제되는데 따른 불이익 내지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TPP로 복귀할 필요성이 클 것임
- 미국을 TPP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TPP11을 조기에 발효시키고 TPP16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RCEP 등 여타 메가 FTA교섭을 자극하는 것도 득책임
- 차선책으로는 미국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TPP규범·규정들을 재검토하여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동결내지는 취소시키는 것임. 